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2면	"도 반도체 클러스터 '제2의 레고랜드·알펜시아' 우려"	1
江原日報	03면	"강원형 반도체 유치 전략 부족 성과 미흡"	2
KBS 춘천	온라인	"강원 반도체 산업 저조"... "이제 시작 단계"	3
G1방송	온라인	박윤미 도의원 "반도체 산업 육성..미흡"	4
ms투데이	온라인	강원도의회 도정질문 돌입? '지역의사제' 도입 제안	5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 강원자치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6
亞洲經濟	온라인	심영곤 도의원, 응급의료 및 교통 인프라 구축 등 현안 해결...	7
신아일보	온라인	심영곤 도의원, 열악한 응급의료 문제 등 집중 언급	8
江原日報	04면	[알립니다] 지역소멸 해결 성장 발판 찾는다	9
江原日報	04면	1인 가구 절반시대 ... 지원조례는 속초시뿐	10
江原日報	06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한다	11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도 감사 연장 무게 대형사업 다시 '도마위'	12
江原日報	16면	양구 공공임대주택 100세대 공급	13
江原日報	15면	아동·여성·노인 살기 좋은 영월 만든다	13
강원도민일보	13면	인제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14
강원도민일보	12면	동해시 'K-패스' 대중교통비 최대 53% 할인	14
江原日報	10면	춘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 탄력	15
江原日報	11면	소초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재추진 반발	15
江原日報	13면	인제 자작나무숲 '힐링·놀이 동시에'	16
江原日報	14면	삼척 반려동물 테마파크 내년 3월 첫선	17
江原日報	13면	속초시의회 외국인 근로자 권익 강화 앞장	17
강원도민일보	10면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 추진단 오늘 출범	18
강원도민일보	16면	속초시 청호동 국유지 매입 백지화	18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의협, 대화 거부 명분 없다	19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의장단 다수당 독점 경계를	20
江原日報	19면	[사설] '바이오 국가 특화단지' 유치, 사활을 걸어야 한다	21
江原日報	19면	[사설] 의대 증원 최대 절반 축소, 이젠 갈등 끝내야 할 때	22

강원도민일보

2024 04 23 ()

02

“도 반도체 클러스터 ‘제2의 레고랜드·알펜시아’ 우려”

도의회, 기업유치 부진 지적
“도민, 주력 바이오 헬스‘꿈아’
도 “투자 선행 아닌 사업 선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제2의 레고랜드·알펜시아·드론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다시 제기됐다. 박윤미(원주) 의원은 22일 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질의에서 “반도체 산업 추진단이 만들어진 지 2년 동안 유치 대상 기업 1046곳 중 현재까지 업무협약이 진행된 기업은 3곳에 불과하다”며 “기업들을 원주로 불러들이기 위한 강원도만의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지와 용수 문제도 연이어 지적됐다. 박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최소 100만평의 부지가 필요한데, 도에서는 발표한 40만 5000평은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반도체 산업을 육

성하는데 충분한 면적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용수 확보에 대해선 “원주에서 사용하는 용수가 화천댐, 소양강댐, 월성댐이 있는데, 이를 사용하려면 관로 매설 비용 1조 200억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마련 대책을 따져물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본지가 도내 시장·군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설문조사를 언급하며 “(시장·군수들이)도가 주력해야 할 첨단산업은 반도체 산업이 아닌 바이오 헬스 산업을 1순위로 꼽았다. 이는 현 도정과 시군정의 인식 차이가 현저하게 다르다고 밝혀지는 것”이라며 “시군정에서 반도체 산업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이런 답변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박윤미



심영곤



하석균



최재민



2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에서 김진태 도지사가 심영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남진우 강원도 산업국장은 “반도체 산업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 강원도의 좋은 여건을 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뛰어들어 유리한 이점을 살리는 것이다. 레고랜드, 알펜시아, 드론 사업과는 다른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강원형 반도체 산업 추진 정상화를 강조했다.

심영곤(삼척) 의원은 “갈수록 열악

해지는 강원 지역의료현실의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의 사제 도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석균(원주) 의원은 “세계적인 신종 감염병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 강원은 자치단체 분야별 안전 등급에서 감염병 분야 5등급을 받았다”며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원주에 보

건환경 연구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최재민(원주) 의원은 “지정면 안창리~흥업면 사제리 도로 확장 및 원주 공항 활성화, 통합 학교 운영, 봉화산 택지 초교 신설 등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도민과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거침없이 정의의 힘을 부각시킨다”고 주문했다.

이정호

江原日報

2024 04 23 ()

03

“강원형 반도체 유치 전략 부족 성과 미흡”

도의회, 올해 첫 도정질문

올해 처음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서는 김진태 도정 핵심 공약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윤미(더불어민주당·원주) 도의원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유치·공유대학·부지조성·용수 등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반도체산업 추진단이 만들어진 지 거의 2년에 가까운 기간 겨우 3개 업체와 업무체결을 했다는 것은 미흡한 성과”라며 “공유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타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 졸업생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인력을 잘 키워 수도권으로 보내는 형국이 될까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부지 면적은 최소 100만평이 필요한데 도에서 발표한 부지는 턱없이 좁고, 용수를 인근 댐에서 공급하려면 관로 매설 비용으로 1조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말 성공 가능한 전략인지 심사숙고할 시기다. 반도체산업이 제2의 레고랜드, 알펜시아, 드론사업처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진우 도 산업국장은 “투자협약은 올 초까지 4건이며 상당히 확장성이 있는 기업들이다. 교육센

“2년간 3개 업체와 업무체결... 인력 키워 수도권 유출 우려” 지적
도 “획기적 예산 투자 아니야, 좋은 여건 활용 미래 먹거리로 추진”

터, 테스트베드 등 기업 지원 시설이 완공된 2026년 이후에는 더 많은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또 “용수 관로 매설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수백조원의 반도체 제조기업 투자계획에서 관로 매설 비용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언급된 사업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좋은 여건을 잘 활용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지 특정 사

업에 도가 획기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석균(국민의힘·원주) 도의원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은 전임 도정 때부터 도민을 괴롭혀 왔다. 현 도정에서 이를 책임지고 수습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 의원은 “특히 KH강원개발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일반법인인데 농지를 취득하겠다고 계약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전에서 임야로 조용히

지목을 변경, 공시지가를 떨어뜨려놓았다. 수사 의뢰 대상”이라고 했다.

최재민(국민의힘·원주) 도의원은 “국지도 88호선 중 기업도시에서 서원주역 사이 2.2km를 2차선으로 공사하면 공사 완료 후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4차선으로 확장 검토를 당부했다.

의료 현실 개선을 주문한 심영곤(국민의힘·삼척) 운영위원장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도내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



◇2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도정질문에서 심영곤(국민의힘·삼척) 운영위원장이 응급의료와 관련해 김진태 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KBS 춘천

2024 04 22 ()

“강원 반도체 산업 저조”...“이제 시작 단계”



강원도의회 박윤미 도의원은 오늘(22일)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강원도의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반도체 공유 대학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진우 강원도 산업국장은 강원 반도체 산업은 이제 시작 단계로 향후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으며, 반도체 공유 대학은 장기적인 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순정 flyhigh@kbs.co.kr

2024 04 22 ()

G1방송

박윤미 도의원 "반도체 산업 육성..미흡"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강원자치도의회가 오늘(22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올해 첫 도정과 교육행정 등을 질의했습니다.

도정질문에서 박윤미 도의원은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해,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관련 유치 대상 기업 천 46곳 중 현재까지 업무협약이 이뤄진 기업은 3곳뿐"이라며,

"이 기간 431회의 출장을 다니면서 겨우 3곳만 업무 협약했다는 것은 미흡한 성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엄기호 도의원이 학생 조식 제공과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등 학생 건강 확보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 04 23 ()

ms투데이

강원도의회 도정질문 돌입? ‘지역의사제’ 도입 제안

진광찬 기자

22일부터 3일간 도정·교육행정 질문
 심영곤 의원, 지역의사제 도입 제안
 김 지사 “의료인 부족 사태 타결해야”
 전임도정 겨냥 알펜시아 매각 질타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7월 임기 반환점을 도는 김진태 강원도정의 공약 이행 사항과 도내 현안 점검에 나섰다.

도의회는 22일 제327회 임시회에서 올해 도정·교육행정 질문에 돌입했다. 이번 도정·교육행정 질문은 24일까지 3일간 이어진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심영곤 국민의힘(삼척) 의원은 도내 응급의료 문제점과 도정의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심 의원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도내 의료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도의 미래가 없다”며 “의료인은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것과 달리 전공의가 되려면 길게는 10~20년이 걸린다.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필수 의료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사태를 단기간에 메우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료인 부족 사태로 갈등이 계속되는데, 하루속히 타결하고 머리를 맞대 논의해 나갈 때”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한 해 의사를 3000명 배출하면 소아과를 지망하는 의사 수는 30명이 안 된다. 이들은 서울 대형병원으로 빠질 텐데, 그러면 강원도는 소아과 의사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다”며 “일본이나 캐나다에서는 이미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지역의사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의대생을 선발하는데 지역인재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비전속 진료라고 해서 한 의사가 한 병원에 소속돼있지만, 다른 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넣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제327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하석균(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 지사 대표 공약으로 꼽히는 도내 교통망 구축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준비 사항을 묻는 심 의원 물음에 김 지사는 “도내 SOC 사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영월-삼척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도권에 빨리 갈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완비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KH그룹 관련, 강원개발공사가 발주한 평창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하석균(원주) 국민의힘 의원은 “계약 때부터 유권상 독소조항 때문에 이자도 못받고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도 없다”며 “소극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이 반복되는데, 김진태 도정에서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박윤미(원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정 반도체 산업 전반과 신중년 정책에 대해, 최재석(동해) 국민의힘 의원은 항만-폐광 정책에 대한 전반을 되짚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2024 04 23 ()

江原日報

[포토뉴스] 강원자치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사진=신세희기자

22일 강원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심영곤(국민의힘.삼척) 의원이 응급의료와 관련해 김진태 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신세희기자

22일 강원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박윤미(더불어민주당.원주) 의원이 반도체 산업에 관해 남진우 도 산업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 04 22 ()

亞洲經濟

심영곤 도의원, 응급의료 및 교통 인프라 구축 등 현안 해결에 대한 촉구

열악한 응급의료 문제 등 집중 언급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영곤 의원(삼척 2)은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원도 내 응급의료 및 교통 인프라 구축 등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강원도 내 의료 현실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도의 미래가 없다"라며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심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SOC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김진태 지사의 중요 공약에 해당하는 사통팔달 교통·물류의 중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강원도 내 열악한 의료 현실과 관련하여 "도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심 의원의 발언을 의식하며,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도 도내 현안 사업에 대한 중단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아주경제=춘천=이동원 기자 lay1323@ajunews.com

2024 04 22 ()

신아일보

심영곤 도의원, 열악한 응급의료 문제 등 집중 언급

김정호 기자

응급의료 및 교통 인프라 구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 촉구



심영곤 도의원 (사진=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영곤 의원이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4월 22일) 도정 질문에서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도내 의료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도의 미래가 없다”는 말을 전했다. 특히 이러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심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SOC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김진태 지사의 중요 공약에 해당하는 사통팔달 교통·물류의 중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문제 없이 이행해 주길 부탁드립니다”고 김진태 도지사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도내 열악한 의료 현실과 관련, “도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심 의원 발언을 의식하며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도 도내 현안 사업에 대한 중단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신아일보] 강원도/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

江原日報

2024 04 23 ()

04

알립니다

‘2024 춘천의 성장과 인구전략’ 포럼

지역소멸 해결 성장 발판 찾는다

25일 오후 2시 강원대 글로벌경영관

최근 들어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원일보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교와 함께 ‘2024 춘천의 성장과 인구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 지역 차원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찾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지역사회가 붕괴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이번 포럼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4년 4월25일 오후 2시
- 장소 : 강원대학교 글로벌 경영관 AMP 컨퍼런스홀
- 발제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로컬 브랜딩과 콘텐츠타운’
△조명호 강원연구원 박사 ‘춘천시 지역성장과 인구 소멸 대응전략’
- 토론 :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좌장) △경창현 춘천시 자치행정과장 △임미선 도의원 △박인옥 강원대학교 교수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 지역대응센터장
- 주최 :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강원대학교·강원일보사
- 주관 : 춘천시·강원일보사

江原日報

2024 04 23 ()

04

1인 가구 절반시대 ... 지원조례는 속초시뿐

도내 34만6,514가구 혼자 사는데 정책은 '독거노인 지원' 수준
전문가 "고독사 예방 별개 사회적고립 막을 관계형성 대안 필요"

강원지역 1인 가구 비중이 전 연령대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시·군 정책은 '독거노인 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질병, 범죄, 사고 예방을 위해 기초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속초시 1곳이 전부다. 도내 1인 가구는 2020년만 해도 23만1,000가구였지

만 올해는 34만6,514가구로 4년만에 50%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는 시·군도 8곳이나 된다.

각 시·군의 1인 가구 정책은 독거노인을 위한 안부 확인이나 도시락 지원이 주를 이룬다. 그 사이 '신중년(50~64세)'이 사각지대가 됐다.

실제로 속초시가 지난해 지역 내 1인 가구 1만8,150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복지 정책, 일자리, 가족 돌봄

등에서 소외돼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는 세대가 783가구(4%)였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신중년이 339가구로 노인(305가구)보다 많았고, 청·장년도 139가구로 적지 않았다.

속초시는 1인 가구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시비 1,000만원을 들여 청·장년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한다. 우울증 예방 교육, 혼밥 반찬 만들기 교육 등을 들으며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 같은 청·장년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강릉(밀키트 지원을 통한 식생활

개선), 횡성(문화여가 교실) 정도다.

앞서 올 2월9일 평창 미탄면에서는 설을 앞두고 60대 초반 남성이 숨질 위기에 있었으나 경찰이 발견했다. 남성은 우울증이 있었고 가족, 지인들과의 불화로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며 고립감을 호소했다.

허목화 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군마다 고독사 예방 조례는 있지만 이는 최후의 안전망이고 그 전 단계로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관계 형성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2024 04 23 ()

06

江原日報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한다

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건설업 불황 올들어 40% 급증
상반기에 1조원 돌파 가능성

노동부, 의심 사업장 감독 강화
고의적 은닉 재산 여부 등 조사

전반적인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이 올해 들어서도 무려 40%나 급증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도산 등이 잇따르는 건설업계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과 함께 임금 지급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업주들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 상반기 임금체불 1조원 넘을 가능성... 건설업 침체 영향 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체불된 임금은 5,7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4,075억원)보다 40.3% 급증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임금체불액은 상반기에 1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서도 다시 급증세다. 연도별로 보면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원에서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 2022년 1조3,472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조7,8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5% 급증해 사상 최대를 찍었다. 더욱이 올해 1분기 임금체불 증가율은 지난해 증가율보다 더 높은 40.3%에 달했다.

임금체불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건설업계 불황이 꼽힌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는 104곳으로 전년 동월(333곳) 대비 68.7% 급감했고, 폐업 업체는 83곳에서 104곳으로 25.3% 늘었다. 지난해에도 건설업계 불황은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24.4%를 차지했고, 전년(2,925억원)보다 49.2% 급증했다.

■정부, 악의적 임금체불 등 '철퇴' 예고... "사업자 인식도 바뀌어야"=정부는 임금체불이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기도 했었다. 두 장관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올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에 나서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상습 체불 사업자의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주고, 신용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또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단속 강화도 필요하다는 한편 사업주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 또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사업체가 어려워지면 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기계설비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임금을 고려한다"며 사업주들이 임금 지급을 '우선순위'에 두는 인식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규호기자 leekh@kwnews.co.kr



2024 04 23 ()

강원도민일보

01

강원도 감사 연장 무게 대형사업 다시 ‘도마위’

총선 영향 최대 1주 기간 연장
KH 과징금 부과 전 포함 관심
민선 8기 공직내 피로도 증가

속보=강원도정에 대해 9년 만에 실시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본지 2월 22일자 2면)의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현직 도정에서 논란을 낳은 레고랜드 개발사업이 감사 테이블에 다시 오를 것으로 보여 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알펜시아 매각을 둘러싼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KH그룹에 51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건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해당 건에 대해 감사가 진행된다면 전임 도정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맞물리고 있어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22일 본지 취재결과, 감사원 지방행정1국5과는 사전조사를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8기 도정에 대한 본 감사를 진행 중으로, 당초 오는 30일 감사를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2대 총선 국면에서 본감사가 일시 중지됨에 따라 감사 기간을 최대 1주일 정도 연장하는 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도 관계자는 “(본감사가) 총선 여파로 최대 일주일 정도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칼 끝을 겨누고 있는 사업은 레고랜드 개발사업이다. 전임 도정 당시 도는 레고랜드를 운영하는 영국 멀린사에 도유지인 하중도를 최장 100년간 무상 임대하기로 해 불공정계약 논란을 낳았다.

현 도정에선 ‘레고랜드 보증채무 지급 불이행’ 논란이 연계된다. 2022년 9월 불거진 해당건은 전현직 강원지사 간 진실 공방으로 확대됐었다.

시군 사업 중에선 △양양의 공유수면 시설물 점용·사용허가 △평창의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등이 본감사 대상이 됐거나 검토 중이다.

도정에 대해 9년 만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 도 감사위원회 차원의 감사까지 줄줄이 이어졌던 터라 공직 내부의 피로도가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감사위는 혈세 낭비 논란이 촉발된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을 비롯해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이 제기된 망상1지구 사업, 사업 전담 민간업체의 부실로 규제자유특구 해제가 된 태백수소 규제자유특구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심예섭 yess@kado.net

江原日報

2024 04 23 ()

16

양구 공공임대주택 100세대 공급

상리 8,000㎡ 규모 ... 내달 7일부터 4일간 신청 접수
내년 2월부터 입주 ... 인터넷·직접 방문 통해 신청 가능

【양구】양구군이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100세대를 공급한다.

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구읍 상리 124-1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양구군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입주자를 5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모집한다.

8,000㎡ 규모의 부지에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은 8층 규모의 아파트 3개 동으로 올 10월

준공, 2025년 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세대당 면적은 26㎡ 20세대, 29㎡ 24세대, 33㎡ 28세대, 46㎡ 28세대 등 4개 타입으로, 영구 임대 20세대, 국민 임대 80세대 등이다.

영구 임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다. 5월8~10일 거주지 읍·면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구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국민 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최대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5월7~10일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인터넷과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으로 진행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주민은 5월8~10일 군보건소 3층 소회의실을 방문하면 된다.

서흥원 군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무주택 저소득층과 주거약자의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며 “이곳에 틈새공원 조성 and 인근 군립도서관, 스마트 어린이 놀이시설 등 주변 정비를 통해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래석기자 redfox9458@

江原日報

2024 04 23 ()

15

아동·여성·노인 살기 좋은 영월 만드다

군 스토킹·아동학대 예방·사회적 약자 지원 조례 추진
최명서 군수 “지역사회 복지 증진·사각 해소 최선”

【영월】여성친화도시 영월군이 아동과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

군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조례 제정(안) 3개

를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서는 효율적인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교육, 시책 발굴, 시행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학대 피해 아동 센터 설치

및 운영을 비롯해 아동 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 보호, 상담·조사, 피해 아동 보호 계획 수립 등이 가능하도록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도 추진한다.

특히 저소득 주민 복지 증진 지원 조례 등도 제정해 생계·의료·주거·장제·교육·보육·출산·양육·돌봄·월동·폭염·미세먼지 등 대책 관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군이 선보인 어린이집 24시간 운영 및 야간 연장, 지역 아동 센터 야간 돌봄 확대, 영월의료원 야간 소아과 운영 등은 군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최명서 군수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 사각 지대 해소와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윤석기자 papersuk1@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4 23 ()

13

인제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군, 내년까지 96억원 투입
목재놀이터·공방카페 조성
정부 선정 기반다지기 속도

인제 자작나무숲 일원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조성된다.

2022년 산림청 지방이양 공모사업에 선정된 인제군은 도비 44억원을 확보, 오는 2025년까지 총 96억원 투입해 매년 45만명의 방문객이 찾

는 원대리 자작나무숲 일원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까지 부지매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연면적 1300㎡ 규모의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에는 목공예체험실, 목재어린이놀이터, 공방카페 등이 조성된다.

시설 외부에는 추가예산을 확보해 산책로, 전망대, 자작나무숲 테마정원 등을 조성한다. 또 2023년 행정안전

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도 선정돼 주차장, 진입도로, 숲체험시설 등 목재체험장 기반조성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제군 자작나무숲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선정하는 '꼭 가봐야 할 한국 대표 관광지 100선'에 2015년부터 5회 연속 이름을 올릴 만큼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대표 산림 관광지다. 지난해에는 산림청 주관 '걷기 좋은 명품숲길 30선' 중 최우수 숲길로 선정되기도 했다.

인제군은 다채로운 산림휴양 인프라를 구축해 자작나무 숲 일대를 명품숲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자연복원 방식으로 복원된 갈대군락지는 2025년 개방을 목표로 보식작업 중이며 산림청 공모사업인 테마정원 조성 사업도 목재체험장 조성 일정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자작나무숲을 사계절 산림 힐링 명소로 육성해 지역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강원도민일보

2024 04 23 ()

12

동해시 'K-패스' 대중교통비 최대 53% 할인

내일부터 신청, 내달 첫 시행
저소득층 4만8000원까지 환급
탄소중립 실현 경제부담 완화

동해시가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추진한다.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비를 20~53% 할인해주는 사업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동해시민이 K-패스카드를 월 15회 이

상 사용할 경우 할인율은 일반인 20%, 19~34세 청년 3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53%다. 월 최대 60회 환급된다.

현 교통비 1500원을 기준으로 일반인은 월 최대 1만8000원, 청년의 경우 2만7000원, 저소득계층은 약 4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 다음달에 청구할인(신용카드), 계좌입금(체크카드), 충전(모바일 선불카드) 방식 등 카드사의 지급방식에 따라 환급이 진행된다.

K-패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4일부터 11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K-패스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 K-패스 공식 홈페이지나 어플에 회원가입 후 5월 1일부터 사용하 된다.

국토교통부 주관의 K-패스는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민자철도 등 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된다. 동해 이외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시 혜택이 부여된다. 시는 주요 승강장과 공

공용 지정계시대에 홍보포스터 게재, 각종 축제 때 홍보전단지 배포, 안내전광판 3곳과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 22곳에 홍보문구 송출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장범중 시 교통과장은 "이번 K-패스 추진은 대중교통 활성화로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고, 3고시대에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동명 ldm@kado.net

2024 04 23 ()

江原日報

10

춘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 탄력

문화재 보존 심의 통과... 하반기 중충부 발굴 착수
내달 주민 공청회 개최 후 시의회 의견 청취 진행

【춘천】춘천 캠프페이지 도시 재생혁신지구 개발 사업이 문화재 보존 심의를 통과하면서 큰 산을 넘었다.

첨단 산업 복합 공간 조성을 위해 부지 내 문화재를 이전·보존하려는 춘천시의 계획이 정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번 조치로 올 8월 발표될 도시재

생혁신지구 공모 선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춘천시는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근화동 캠프페이지 내 유적 보존 방안에 대한 조건부 승인 결과를 회신받았다. 현재 캠프페이지는 앞선 민선 6~7기 제시된 공원화 방향에 맞춰 표토에서 2m 깊이의 상층부

발굴 허가만 내려진 상태지만 이번 문화재청 승인으로 더 깊은 중충부 발굴이 가능해졌다.

2019년부터 시작된 상충부 발굴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고 통일신라 말~고려시대 초 건물 터 등이 발견됐다. 문화재청의 요구 조건에 따라 시는 상충부 발굴 과정에서 확인된 대형 건물 유구는 그대로 땅을 덮고 상부에 건물지를 재현하는 보존 조치를 시행한다.

또 수레가 오간 도로 흔적은

표식 복원을 진행하고 나머지 건물지와 수혈 유구 등은 꿈자람어린이공원 뒤편에 1만㎡ 이상 규모의 역사공원을 조성해 이전 보존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와 함께 시는 올 하반기 중충부 발굴에 착수해 늦어도 2027년 초까지 하충부 발굴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육동한 시장은 옛 캠프페이지 52만㎡ 부지를 K-컬처와 첨단 산업, 상업, 공원 등이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전체 사업 규모는 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캠프페이지는 지난해 도시 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됐고 6월 본 공모 신청, 8월 결과 발표를 앞뒀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행정 인허가에 대한 통합 심의를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주민 공청회를 열고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정윤호기자

2024 04 23 ()

江原日報

11

소초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재추진 반발

반대위 “발암물질 배출 건강 위협” 총궐기대회 예고
업체 측 “처리 과정 투명하게 공개... 상생 방법 모색”

【원주】속보=원주 소초면 주민들이 의관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본보 2023년 12월22일자 17면 보도)의 재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소초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최근 소초면 의관리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 재추진 반대 문구를 담은 플래카드를 시청 앞에 내건 데 이어 사업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M환경은 사업자인 의관리 주민들의 찬성 의견을 토

대로 지난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의료·일반폐기물을 하루 평균 80여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 사업 신청서를 냈지만 일부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후 업체는 사업 예정지를 기존과 60m 떨어진 곳으로 옮기고, 면적도 8,000㎡로 축소해 변경 허가를 낸 후 원주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밟는 중이다.

하지만 의관리를 제외한 소초면 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동하 반대위원장은 “돈사에서 악취 등으로 수십년째 고통받고 있는 소초면이 이달 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모순된 일”이라며 “발암물질 배출에 따른 주민건강이 위협받는 일

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반대 주민들과 대화해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폐기물 처리 과정도 전부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발암물질 배출 여부도 습식 세정기와 백연방지 등 정화장치로 걸러내기 때문에 배출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인규기자

江原日報

2024 04 23 ()

13

인제 자작나무숲 '힐링·놀이 동시에'

목재문화체험장 대상 선정

2025년까지 96억원 투입

목공체험실·공방카페 조성

【인제】인제군 명소인 원대리 자작나무숲 일대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힐링과 나무놀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됐다.

22일 군에 따르면 2022년 산림청 지방이양 공모사업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도비 44억원을 확보했으며, 2025년까지 총 96억원을 투입해 목재문화체험장을 건립한다.

지난해까지 부지 매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번 달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연면적 1,300㎡ 규모의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에는 목공예체험실, 목재 어린이놀이터, 공방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설 외부에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산책로와 전망대, 자작나무숲 테마 정원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군은 2023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지로도 지정돼 자작나무숲 일대 주차장, 진입도로, 숲체험시설 등 목재체험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자연복원 방식으로 복원된 갈대군락지는 2025년 개방을 목표로 보식작업 중이고, 산림청 공모사업인 테마정원 조성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최상기 군수는 "자작나무숲을 사계절 산림 힐링 명소로 육성해 지역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제 자작나무숲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선정하는 '꼭 가 봐야 할 한국 대표 관광지 100선'에 2015년부터 5회 연속 이름을 올린 대표 산림 관광지다.

최영재기자 yj5000@kwnews.co.kr

2024 04 23 ()

江原日報

14

삼척 반려동물 테마파크 내년 3월 첫선

하이원추추파크 내 21만8,282㎡ 규모 올해 착공
반려동물 숲·캠핑장 등 추진 ... 네이밍 공모 시행

【삼척】삼척시가 폐광지역인 하이원추추파크에 추진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내년 3월 첫선을 보인다.

박상수 삼척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는 하이원추추파크 내 21만8,282㎡ 부지에 글램핑장, 오토캠핑장, 산책로, 운동장, 수영장, 놀이터 등을 갖춘 반려동물 놀이 숲과 반려동물 캠핑장 등으로 꾸며진다. 시는 원주지방

환경청과 자연환경을 60% 보존한다는 협의를 벌인 데 이어 하이원추추파크 소유의 원형지를 매입해 시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고시를 앞두고 있다. 본격 실시 설계를 마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와 폐광지역 주민들은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개장하면 급증

하는 펫팸족(Pet+Family)과 캠핑 동호인들을 유치하는 새로운 개념의 관광기반시설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이름을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22일부터 5월17일까지 4주간이며, 시와 반려동물 테마

공원의 이미지를 잘 연상시킬 수 있는 명칭으로 차별성과 독창성을 보유한 명칭, 누구나 부르기 쉬운 명칭, 삼척과 반려동물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뽑을 예정이다.

시는 응모작품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황민진기자 hmj@kwnews.co.kr

2024 04 23 ()

江原日報

13

속초시의회 외국인 근로자 권익 강화 앞장

사회 적응 돕는 지원 조례 도내 최초 발의
고용상담·고충 해결·협의체 구성 등 담겨

【속초】근로인력 감소에 따른 인력난 해소 대안으로 증가하고 있는 속초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이 도내 최초의 조례를 바탕으로 한 차원 강화될 전망이다.

염하나 속초시의회 부의장은 22일 지역 외국인 근로자

의 원활한 사회 적응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속초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속초시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두 번째, 도내에서는 첫 제

정이다.

이번 조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채워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담 및 고충 해결, 근로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지역문화 적응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원협의

체 구성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염하나 부의장은 “지방의 노동인구 감소는 지역의 건강한 경제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존립 자체까지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적응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권원근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4 23 ()

10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 추진단 오늘 출범

범시민 출정식 갖고 총력 다짐
태릉 대체 구 야공단 부지 제안
KTX·공항 이점 유치의지 결집

원주지역사회가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총력전을 펼친다.

시는 23일 오후 2시 동부복합체육센터에서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 범시민 추진단' 출정식을 갖고 유치 분위기를 확산에 나선다.

유치 추진단에는 시는 물론 교육청, 체육회, 대한노인회 시지회, 사회

단체협의회, 이통장협의회, 자율방범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시지회, 후계농업경영인 연합회, 새마을회, 여성단체협의회, 바르게살기사업협의회, 재향군인회, 주민자치협의회, 기독교연합회, 불교 사암연합회, 원주예총, 민예총 등 시 주요기관과 각종 단체가 대거 참여한다. 위원장은 원강수 시장, 이재용 시의장, 주영일 교육장, 정동기 체육회장, 유종우 노인회 지회장, 김정운 사회단체협의회장, 우민종 기독교연합회장, 해공불교사암연합회장 등이 공동으로 맡아, 원주 유치 의지를 다지며 역량을

결집한다.

시는 2027년 철거가 예정된 서울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방산장 유치(건립부지 선정) 공모에 지난 2월 7일 원주 구 1107야공단 부지를 후보지로 제안하며 유치전에 나섰다.

시는 KTX역, 고속도로 6개 IC, 국도 3개, 원주공항(국제공항 승격추진), 여주~원주복선전철착공, GTX-D 원주 확장 등 우수한 교통망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국방부 소유인 대체부지를 대한체육회가 사용토록 협의를 완료해 형질 변경 최소

화, 사업비 절감 등에 유리하다.

국내 유일 IOC리서치센터(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와 닥터헬기 응급대처 능력, 동계스포츠가 열렸던 평창·정선군, 강릉시와의 연계, 학생선수 훈련 학습병행 가능 등도 강점이다. 시 관계자는 "대한체육회가 조만간 부지선정위원회 개최, 5월 중 현지실사 등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원주의 강점을 적극 알리고 지역 유치 의지를 최대한 결집해 원주를 국내빙상 스포츠의 중심으로 이끌 이번 사업을 꼭 유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기영

강원도민일보

2024 04 23 ()

16

속초시 청호동 국유지 매입 백지화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등 무산
예정부지 대부·무단점유 원인
시의회 "안일한 졸속행정" 질타

속초시가 청호동 내 문화·체육·행정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한 국유지 매입사업이 백지화 될 전망이다.

속초시는 지난 19일 속초시의회에서 열린 제1차 정례위원회에서 2024

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하며 청호동 국유지 매입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시는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청호동 지역의 문화·체육·행정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스포츠 타운, 위케이션 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해 설악대교 남동측 2만 5692㎡ 약 7700평의 국유지를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제 3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았으며 올해 당초 예산에도 국유지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 약 28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후 매입 예정부지에 대한 대부 및 무단점유 시설에 대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결국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보고를 받은 시의회는 안일한 행정이라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특히 김명길 의장은 22일 열린 제

3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최사를 통해 "속초시가 매입 예정부지에 대한 대부 및 무단점유 현황 등에 대한 사전 검토조차 없이 매입 계획을 의결받은 후 문제점이 발생하자 대안 없이 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은 속초시를 신뢰하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졸속행정"이라며 "추후 이러한 행정의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했다.

박주석

강원도민일보

2024 04 23 ()

/ 19

의협, 대화 거부 명분 없다

-국민 염원 부응해 소통 물꼬 터야

의사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와 의대 자율 증원을 모두 거부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문제 해결이 더욱 불투명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로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심경입니다.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대화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일단 함께 만나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의사들의 대화 거부 명분을 찾기 힘듭니다. 백지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논리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와의 대치 구도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 여론과 염원이 무엇인지 먼저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의료개혁 쟁점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위가 오는 25일 출범할 예정이지만, 대한의사협회가 특위 참여를 거부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단체 또한 특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진료 유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 험로가 예상됩니다.

이처럼 상황이 장기화하자, 정부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민 단체는 정부의 '대학 자율 모집' 방침이 의사들에게 백기를 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국립대학 총장들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 결국 의대 정원 증원 현안이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못박아오던 '2000명 증원'을 총선 패배 후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도내 각 의대는 내년도 증원 규모를 다시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도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책임이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도면밀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내용의 일관성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진지하게 의사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의사들의 주장과 행동이 정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신입생 정원 재검토를 전제로 대화를 요구하는 자세는,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 구실을 들어 증원을 막으려는 의도로 비칩니다. 의사들이 스스로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식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의협이 열린 자세로 임할 때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4 23 ()

/ 19

의장단 다수당 독점 경계를

-도의회 하반기 구성, 야당에 배분하는 변화있어야

지방의회의원 4년 임기 중 절반이 다가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하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구성을 놓고 의원간 경쟁이 시작됐다는 보도입니다.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측에서 독점한 것에 이어 하반기에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중론이 내부에서 형성된 탓인지 여당 위주로 의장, 부의장 출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등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 협치론이 요구되는 시기여서 능동적인 변화 필요 시점에 있습니다.

본지 보도에 의하면 하반기 의장 후보로는 6명이 언급되는 중입니다. 해당 직에 도전할 의사가 있는 의원들 사이에 선수 및 지역구 등을 따지며 이미 수면 아래에서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 도의장이 주변 권유를 들며 하반기에 업무 마무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낸 가운데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경력에 있는 국민의힘 다선 의원 중심으로 출마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원주와 같이 도의원이여럿인 지역은 단일화를 통해 목적을 이루겠다는 소식도 나옵니다.

3선 의원이 3명으로 다선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부의장 2석 중 1석 배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다수당

인 여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수의 여당 의원이 의장 출마 의사를 피력한 상황이어서 하반기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부의장 2석까지 모두 여당에서 차지할 가능성이 더 높을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의회 운영과 관련해 의사결정 권한 비중이 큰 의장단 3석을 전·후반기 모두 여당에서 독차지하는 것은 소통하는 정치문화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강원은 도지사 역시 여당 소속입니다. 도행정에 대해 견제 감시해야 할 의회 역할을 고려한다면 유권자인 강원도민이 의회 확보 차원에서 도소망스럽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강원도의회와 같이 의장단을 국민 의회에서 독식한 경우로 충남도의회가 있긴 하나, 여야 협치 정신을 구현한 의회가 더 많음을 눈여겨 봐야 합니다. 충북도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나 부의장 1석은 민주당에 배분했습니다. 제주도의회와 세종시의회는 민주당이 다수지만, 국민의힘에 부의장을 배분해 의장단을 구성했습니다. 모두 기회균등 보장을 통해 의회 본연의 기능과 윤리성을 강화한 조치인 것입니다. 독점과 독재는 영역을 막론하고 더 쉽게 폐해를 부릅니다. 강원도의회는 선진화된 길로 나아감으로써 합리적인 도민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4 04 23 ()

/ 19

‘바이오 국가 특화단지’ 유치, 사활을 걸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가 올 5월 중 발표가 유력한 국내 첫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한다.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한 자치단체는 인천, 수원, 고양, 성남, 시흥 등 수도권 5곳과 강원자치도, 대전, 충북, 경북, 전남, 전북 등 비수도권 6곳으로 총 11곳이다. 유치에 나선 11개 자치단체 중 몇 곳을 지정할지는 아직 공개된 바 없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면 단지 조성 인허가 단축, 산업기반 시설, 공동 연구개발(R&D) 인프라와 의료·교육 시설 등 각종 편의 및 기반 시설 조성, 세 금·부담금 감면 및 민원 신속 처리, 정부 연구개발 국비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기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에 바이오 분야를 추가했고, 2023년 12월부터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를 진행했다. 강원자치도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막강한 인프라를 갖춘 광역시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 더욱 그렇다. 국책사업 유치는 욕심만으로 이뤄내기 어렵다. 치밀한 전략으로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며 역동적으로 뛰어야 가능하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 도전장을 낸 강원자치도는 인천 송도, 대전 등과 경쟁해야 한다. 인천은 글로벌기업과 연구소가 즐비하고 대전은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기에 강원자치도가 상대하기는 버겁다. 그러나 춘천과 홍천을 중심으로 한 강원자치도 바이오산업은 지난 20년간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즉, 수십년간 육성돼 온 만큼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바이오산업단지와 항체클러스터가 조성돼 있어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의 핵심 조건인 사업 연계성 역시 훌륭하다. 백신과 진단기기 등에서 스타기업도 이미 보유하고 있다. 홍천의 국가항체산업클러스터는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주)DDS바이오 등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더욱이 2021년 이후 춘천의 바이오 기업 매출액은 3년 연속 1조원을 돌파했다.

강원자치도 등 전국 11개 자치단체 도전

춘천·홍천 20년간 바이오 생태계 이미 구축

지역사회·정치권, 전략적으로 힘을 모아야

또 국내 유일 항체 연구소, 바이오 의약 강소특구, 항체 중심 글로벌기업 등 산·학·연 기관을 다수 갖추고 있다.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강원자치도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할 수 있다. 1차적으로 강원자치도가 중심에 서야 하고 지역 정치권, 지역사회가 힘을 더해야 정부와 기업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정치적 영향력은 미약하지만 타 시·도에 비해 분명 바이오 인프라가 우위에 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고 이 같은 장점을 십분 살릴 수 있다면 강원자치도는 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또 국내 유일 항체 연구소, 바이오 의약 강소특구, 항체 중심 글로벌기업 등 산·학·연 기관을 다수 갖추고 있다.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강원자치도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할 수 있다. 1차적으로 강원자치도가 중심에 서야 하고 지역 정치권, 지역사회가 힘을 더해야 정부와 기업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정치적 영향력은 미약하지만 타 시·도에 비해 분명 바이오 인프라가 우위에 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고 이 같은 장점을 십분 살릴 수 있다면 강원자치도는 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江原日報

2024 04 23 ()

/ 19

의대 증원 최대 절반 축소, 이제 갈등 끝내야 할 때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신입생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최대 1,000명 선까지 줄어든 수 있다. 도내의 경우 강원대는 교육부에서 배정한 의대 증원 인원 83명 중 절반 수준인 42명만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경우 2025학년도 강원대 의대 선발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132명에서 91명으로 감소한다. 또 한림대는 24명에서 12명으로, 가톨릭관동대는 51명에서 26명, 연세대 의대는 7명에서 4명까지 추가 선발 규모가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가 배정한 의대 증원 인원이 165명에서 84명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사립대는 증원 인원이 적고 내부 합의를 이룬 만큼 50%까지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수험생의 피해도 우려된다. 증원에 맞춰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짜 왔던 수험생들은 다시 계획을 바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학별 의대 모집 인원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실제 의과대학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복잡하다”, “또 바뀌는 것 아니

냐”, “헛갈린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입시 요강을 제출 마감 직전에 변경해야 하는 대학들도 대입 시행 계획을 새롭게 짜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들은 정원 조정을 거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고 다음 달 중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공개될 전망이다.

이번 방침은 두 달 넘게 이어진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정부의 첫 조정안이다. 의대생 집단 유급, 교수 집단 사직서 효력 발생 시점이 코앞에 닥치면서 최악의 상황만은 막으려는 교육지책이다. 그러나 강원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최근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후속 논의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취지의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 속에 추진된 의대 증원을 절반이나 축소하겠다고 물러선 정부 양보안에도 의료계의 대응은 뻣뻣하기만 하다. 이제 의·정 갈등을 끝내야 할 때다. 의협과 전공의 단체도 증원 백지화만 고집할 게 아니라 열린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